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1. 4.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세 무 과]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세무과장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착한임대인(임대료 인하 건물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피해 세제 지원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피해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으로는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관내 개인사업자 및 중소 법인,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인 계명대 동산병원을 비롯한 5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 감면 세목 및 감면율은,

먼저 2021년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액에서 감면하고,

다음으로 관내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구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코로나19 지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사업소분(구 주민세 재산분) 납부를 면제 하고, 과세기준일(6. 1.)현재 의료업에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 25%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액 규모는

- 이번 감면 동의안을 통해 지원되는 구세 감면 규모는 총 17억원으로 추계되며,

2021년부터 구세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구 주민세 균등분) 감면 예상액 7억원을 제외한 착한 임대인 및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액 10억원은 지난해와 같이 대구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및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00821045
------	----------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세무과장)

1. 제안 이유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착한임대인(임대료 인하 건물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피해 세제 지원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2. 감면 내용

가. 감면 대상

- ① (임대료 인하 건물주)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착한 임대인”)

② (개인사업자 및 법인) 일정 기준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자본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법인

③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 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등

■ 선별진료소 등 운영 병원 : 현재 5개소

- 계명대 동산병원(중증환자 전담치료), 구병원, 삼일병원, W병원, 세강병원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지방세 중과 대상) 제외

나. 감면 세목 및 비율 (2021년도에 한함)

① (임대료 인하 건물주)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보전

○ 재산세 건축물분 (임대료 인하액의 10% 재산세 감면, 감면액은 1백만원 한도)

- 2021년 상반기(1~6월) 중에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착한 임대인”)가 해당 건축물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그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며,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 (1구 내의 건축물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착한임대인 및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적용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등을 위하여 2021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1백만원 한도)

* 2021년 상반기(1월~6월)중 임대료 인하액

* 임대료 기준 : 2019년 월평균임대료 (단, 2020년 최초임대인 경우 2020년 월평균임대료)

(신청방법) 2021.6.1.~ 7.31.까지 증빙서류 첨부 신청 (전후 신청도 가능)

☞ 증빙서류 : 임대료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입증서류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② (개인사업자 및 법인) 우리구 자체 재원 부담

-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주민세 50% 감면, 5만원→2.5만원)
 - 2021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해당)의 주민세 사업소분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율의 50% 감면
- 주민세 사업소분의 법인 등 (주민세 50% 감면, 5만원→2.5만원)
 - 2021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1)과 같은 목4)에 해당하는 세율의 50% 감면

③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보전

-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 (의료업 부동산 25% 감면, 선별진료소는 면제)
 - 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하되, 선별진료소(임시건축물)는 전액 면제한다.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면제, 세율: 330㎡초과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주민세 사업소분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율의 납부 면제
- 주민세 종업원분 (6개월분 납부 면제, 세율: 월급여 총액 × 0.5%)
 - 2021년도 1월분 ~ 6월분(귀속월 기준)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면제

다. 2021년 감면 예상액 (2020년 감면 기준 추계)

○ 감면 대상 및 예상액 : 구세 17억원 정도(시세 2억원 별도)

감면 대상	감면내용 및 감면율	구세 감면 예상액
① 착한 임대인 감면 (대구시 특별교부금 보전)	· 착한임대료 동참 건물주 재산세(건축물) 감면 (임대료 인하액의 10%)	(900건) 1.7억원
②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법인) 등 감면	· 개인사업자,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 50% 감면	(27,500건) 7억원
③ 지원 의료기관 감면 (대구시 특별교부금 보전)	· 의료기관 재산세(건축물, 토지) 감면 (25%) · 의료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등 감면 (6개월 면제)	(5개소) 8.3억원

☞ ①항목 및 ③ 항목 : 市 특별교부금으로 보전, ② 항목 : 우리구 부담 (세입 7억원 감소)

라. 기타 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되, 허위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예산 사항 : 7억원 정도 구세 감소 (개인사업자, 법인 주민세 50% 감면분)

○ 지방세 지원 관련 공문 (대구시)

-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시 세정담당관-2647(21. 2. 18.)]

참 고 1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 회의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

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 정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대구광역시 공문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대구시세징수등단-2647(21. 2. 18.)]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대구시)

□ 추진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지역경제 어려움 직면
 -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민생경제 지원
 - 의료기관 감면분(구·군세) 및 착한 임대인 감면분(구·군세) 전액 시비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감면분*은 구·군 재정으로 부담
- * 20년 까지 전액 시세였으나, 세제 개편으로 21년부터 시세 → 자치구세로 전환

□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의료기관, 기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지원 내용

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원

- (사업소분개인사업주주민세^{구군세}) 2021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주민세 50% 감면 (※ 5만원 → 2.5만원)
- (사업소분법인사업주주민세^{구군세}) 2021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출자)금 30억원이하 법인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주민세 50% 감면 (※ 5만원 → 2.5만원)

②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전액 시비 지원)

- (재산세^{구군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의 의료업 부동산 재산세 25% 감면
- (주민세)
 - 중업원분^{구군세} : 21. 1월 ~ 21. 6월분(6월간) 월급여총액에 대한 중업원분 주민세 면제
 - 재산분^{구군세} : 2021년도 재산분 주민세 면제

③ 착한임대료 동참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전액 시비 지원)

- 영세한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2021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 * 건축물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 단,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